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치된 아이들”

아동학대 매년 증가... 지난해 4만1389건 신고 광주시 어린이집서도 아동학대... 벌금 300만원 전문가 “보육교사, 철저한 자격 검증 거쳐야”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막중한 책임 물어야”

최근 어린이집 아이들을 상대로 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실태가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 아동들은 부모도 모르는 사이 일상화된 상습 폭행 등 학대 속에 방치됐지만, 재판에 넘겨져도 가해 교사들은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 등 미약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4년 1만7791건이었던 국내·외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4만1389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3만6417건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4만1389건 중 최종 학대 판단을 받은 건수는 3만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4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 중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700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4986건(16.6%)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처럼 매년 아이들을 상대로 한 일 부 보육교사들의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병변장애 2급을 앓는 5살 아동을 약 한 달에 걸쳐 130여대 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교사는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A(6)군의 머리를 주먹과 컵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 및 다른 보육교사들은 이같은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도 울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으로 보육교사가 피해아동 B(6)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B군의 발꿈치가 들릴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면서 끌고 다니는 가 하면, B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일방적인 학대를 가했음에도 가해 교사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나 제재는 미약한 실정이다.



전남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1심 법원이 고액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피해 아동이 밥을 늦게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귀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세면대로 끌고 가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 학대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찰 수사 이후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경남 사천의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사천시청으로부터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검찰의 기소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추가 징계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사천시청 측의 입장이다.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올해 2월 1심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당시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해자에게 일방적인 학대를 가했음에도 가해 교사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나 제재는 미약한 실정이다.”

등을 잠작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보살필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보육교사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을 거치고, 주기적으로 효과적인 아동 돌봄을 위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해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안 좋아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푸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코로나 확산 시기 술집 종업원 추행, 경찰서장 檢송치

코로나19 확산 시기 술집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10일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한 박성진 전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서장은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2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서장은 이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됐다. 추행 의혹이 나온 당일 광주시는 유형업소발 코로나19 감염 속출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당시 술자리에는 변호사와 사업가가 동석했다. 경찰은 사업가가 음식과 술값 20여 만 원을 지불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탁의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이슬기자

‘광화문 집회 역학조사거부’ 교회신도 인솔자 등 2명 송치

교회신도를 인솔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뒤 역학조사를 거부한 인솔자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서는 광화문 집회에 교회 신도들을 인솔해 참가했음에도 참여자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인솔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인솔한 교회신도 30여 명의 명단제출을 요청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진술로 참석 사실을 은폐한 혐의다.

또 당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놓고 거짓 진술한 B씨도 기소의견 송치됐다.

역학조사 거부나 방해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인면수심’ 지적장애 여친 성착취한 20대 실형

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감금·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광주 지역 숙박업소와 차량 안에서 10대 여자친구 B씨에게 6차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강요하고 대금 88만 원 중 일부를 빼앗고, B씨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 사이 광주의 한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에 30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지적 장애 증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매일 20만 원씩 벌여오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거절한 B씨에게 폭행·폭언을 반복하고, 현장을 찾아 성매매수업에게 돈을 받아내 유혹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우기자

순천대 엘리베이터 작업 도중 50대 추락사

9일 오전 11시5분께 전남 순천시 석현동 순천대학교 내 건물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A(51)씨가 5층 높이(20m 추정)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천장에 고정된 줄에 의지해 측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홀로 엘리베이터를 철거하던 빈 공간에서 측량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LH, 주민 1000명 개인정보 유출...책임 외면 말라”

‘소송 비용액 청구 과정에서 주민번호까지 유출’ 주장 LH ‘피신청인 특정 위해 기재’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한 아파트 입주인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광주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22일 광산구 운남동 아파트단지 주민 1074명

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소송 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개별 발송했다.

앞서 입주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LH에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

다. 이후 LH는 패소 입주인 1074명이 변호사 선임 금액 등 소송 비용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서 성격의 문서를 법원을 거쳐 발송했다.

공 의원은 이 같은 일을 설명하면서 “LH는 ‘피신청인(주민)’ 특정을 위해 원고들의 정보 그대로 기재했을 뿐이고, 법원이 이를 발송한 것이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

오유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